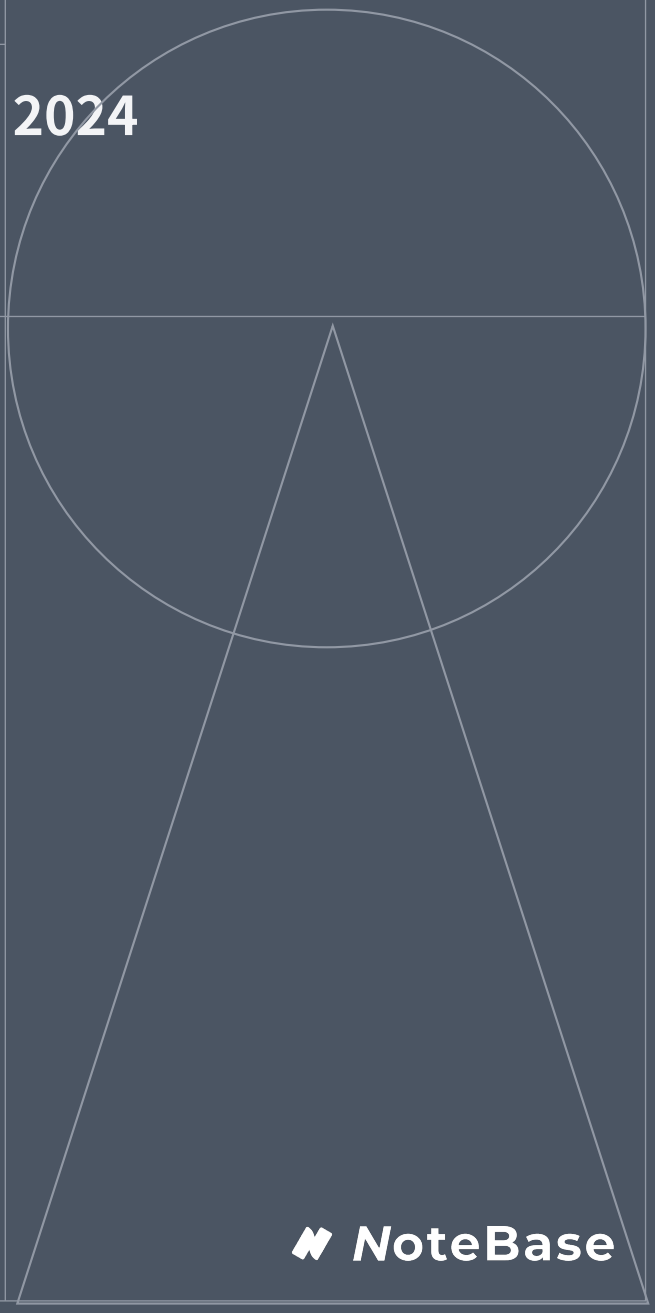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4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4

1. ㉠에 해당하는 경제학 용어로 옳은 것은?

> ㉠ 은/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① 생활물가지수
② 근원물가지수
③ 생산자물가지수
④ GDP 갭
⑤ GDP 디플레이터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관계로 계산하는 종합 물가지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생활물가지수와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출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며, 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큰 생활필수품의 가격 변동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틀린 부분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이며, 올바르게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이다.
② X — 근원물가지수는 농산물·석유류처럼 일시적 충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하여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틀린 부분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이며, 올바르게는 '변동성이 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이다.
③ X —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출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틀린 부분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자 단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이다.
④ X — 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로 경기의 과열 또는 침체 정도를 나타낸다. 틀린 부분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이며, 올바르게는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이다.
⑤ O —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포괄하는 종합 물가지수이다.

오답 포인트

'종합적인 물가지수'라는 표현만 보고 생활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결정적 단서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이며, 이는 GDP 디플레이터의 산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이 제시되면 GDP 디플레이터로 판단한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가 제시되면 GDP 갭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 GDP ÷ 실질 GDP × 100은 GDP 디플레이터이다.

NoteBase

2. 밑줄 친 재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를 의미한다. 한편 재화 중에는 경합성은 가지고 있으나 배제성은 가지지 못한 것들도 있다.

① 소유자가 없다.
②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③ 과잉 이용으로 고갈되어 간다.
④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된다.
⑤ 혼잡한 무료 도로, 공해상의 물고기가 해당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공유 자원의 특징과 사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유 자원은 이용자를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는 재화이다. 즉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함께 가지므로 과잉 이용과 고갈이 나타날 수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공유 자원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문제에서 말하는 공유 자원은 특정 개인의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권이 분명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하기 쉽다.
② O — 공유 자원은 희소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감소시킨다.
③ O —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경합성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이용하면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된다'이다. 공유 자원은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사적 재화라고 볼 수 없다.
⑤ O — 혼잡한 무료 도로는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고 이용자 배제가 어려우며, 공해상의 물고기도 포획하면 남은 양이 줄고 특정인의 이용을 막기 어려우므로 공유 자원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앞부분에 나온 공공재만 보고 비경합성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 밑줄 친 재화는 경합성이 있으므로 과잉 이용과 고갈이 나타날 수 있으며, ④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적 재화의 성격을 섞은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자를 막기 어려운지로 배제성을 판단하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량이나 편익을 줄이는지로 경합성을 판단한다. 비배제적이면서 경합적이면 공유 자원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공유 자원은 '배제는 어렵고 경쟁은 있다'이며, 대표 문제는 과잉 이용과 고갈이다.

NoteBase

3. ㉠에 해당하는 사회학 용어로 옳은 것은?

> 사회적 집합체 중에서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라고 한다.

① 준거 집단
② 사회 조직
③ 이익 사회
④ 사회화 기관
⑤ 자발적 결사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뚜렷한 공동 목표, 명확한 지위와 역할, 공식적 규범과 절차를 갖춘 사회 집단을 사회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나누고,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집단이다. 핵심 표지는 '공동 목표—지위와 역할의 분화—공식적 규범과 절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준거 집단'은 개인이 태도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신을 평가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틀린 표현은 '준거 집단'이며, 제시문처럼 공식적 지위·역할과 규범·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은 '사회 조직'이다.
② O — '사회 조직'은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지위와 역할이 분화되고 공식적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이므로 제시문의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 '이익 사회'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선택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결합 관계를 뜻한다. 틀린 표현은 '이익 사회'이며, 공식적 지위·역할과 규범·절차를 강조한 제시문의 개념은 '사회 조직'이다.
④ X — '사회화 기관'은 구성원에게 사회의 지식·가치·규범·행동 양식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는 가족, 학교, 대중 매체 등의 기관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화 기관'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공식적 구조를 설명한 말은 '사회 조직'이다.
⑤ X —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관심이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만든 집단으로, 자발적 가입이 핵심이다. 틀린 표현은 '자발적 결사체'이며, 제시문은 가입 방식이 아니라 공식적 지위·역할과 규범·절차를 갖춘 '사회 조직'을 설명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 자발적 결사체도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조직적 모습을 띨 수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에는 '자발적 가입'이 아니라 지위·역할의 명확한 구분과 공식적 규범·절차의 체계화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더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 조직을 고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가 뚜렷함', '지위와 역할의 분화', '공식적 규범과 절차'가 함께 나타나면 사회 조직으로 판단한다. 행동이나 평가의 기준이면 준거 집단, 사회 규범의 학습 기능이면 사회화 기관, 자발적 가입이 강조되면 자발적 결사체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역할—공식 규범이 체계화되면 사회 조직이다.

NoteBase

4. (가), (나)의 내용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 두면 사회는 조화롭게 된다.
>
> (나)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나)
①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③	사적 자치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고의·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손해에 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적 자치의 원칙 =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법이 정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가)는 국가가 개인의 행위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계약 영역에서 구체화된 원칙이다.
(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배상하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본 부분은 맞지만, (나)를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나) 과실 책임의 원칙' → 올바른 표현: '(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② X — (가)는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나)도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틀린 표현: '(가) 계약 공정의 원칙, (나)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올바른 표현: '(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③ O — (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법률관계 형성을 존중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나)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므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④ X —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가)의 취지와 관련되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이 계약 영역에서 구체화된 하위 원칙이므로, 제시문 전체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또한 (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틀린 표현: '(가) 계약 자유의 원칙, (나) 자기 책임의 원칙' → 올바른 표현: '(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⑤ X — (가)는 재산권의 소유와 행사를 보장하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나)를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본 부분은 맞다. 틀린 표현: '(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올바른 표현: '(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가)의 '각자의 자유에 맡겨 두면'이라는 표현을 계약 자유로만 좁게 해석하거나, (나)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를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특히 무과실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예외적 책임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을 강조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손해배상 문장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하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은 사적 자치, 과실 없이도 배상하면 무과실 책임이다.

NoteBase

5. 국제관계 이론에서 다음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국제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 보 기 >

ㄱ. 국가는 힘의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ㄴ. 세력균형 전략으로 안전을 보장하려 한다.
ㄷ.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ㄹ. 집단안보 체제를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현실주의 관점을 파악하고, 현실주의의 핵심 주장인 힘의 우위와 세력균형을 자유주의의 국제법·국제기구 및 집단안보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현실주의: 국가를 이기적이고 핵심적인 행위자로 보며, 국제사회를 국가 간 힘의 경쟁이 벌어지는 무정부적 공간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힘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세력균형을 이루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 한다.
자유주의: 국제법과 국제기구, 집단안보와 국제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현실주의에 해당한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다른 국가의 힘을 견제하는 세력균형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고 본다.
② X — ㄷ의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주장이다. ㄷ을 제외하고 ㄴ을 포함한 'ㄱ, ㄴ'이 올바른 조합이다.
③ X — ㄹ의 '집단안보 체제를 통한 평화 추구'는 자유주의의 주장이고, 현실주의의 세력균형을 설명한 ㄴ이 빠져 있다. 'ㄱ, ㄹ'이 아니라 'ㄱ, ㄴ'이 올바른 조합이다.
④ X — ㄴ은 현실주의에 해당하지만 ㄷ은 자유주의에 해당하며, 현실주의의 힘의 우위 추구를 나타낸 ㄱ이 빠져 있다. 'ㄴ, ㄷ'이 아니라 'ㄱ, ㄴ'이 올바른 조합이다.
⑤ X — ㄷ과 ㄹ은 각각 국제법·국제기구 및 집단안보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주장이다. 현실주의에 해당하는 조합은 'ㄷ, ㄹ'이 아니라 'ㄱ, ㄴ'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안전'과 '평화'라는 표현만 보고 세력균형과 집단안보를 같은 관점으로 묶기 쉽다. 세력균형은 각 국가가 힘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현실주의의 방식이고, 집단안보는 국제적 공동 대응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이기적 국가, 힘의 경쟁, 국익, 권력, 세력균형이 나오면 현실주의로 판단한다. 국제법, 국제기구, 협력, 집단안보가 나오면 자유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는 힘과 세력균형, 자유주의는 국제법·국제기구와 집단안보이다.

NoteBase

6. 갑과 을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갑은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외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의 관련 논문을 수집하였다.
> ○ 을은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인구 조사 보고서에서 지역별 인구와 고령인구 분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보 기 >

ㄱ.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수집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
ㄷ. 자료 수집에 비교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ㄹ.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문헌 연구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헌 연구법은 논문, 통계 자료, 보고서처럼 이미 존재하는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방법이다. 갑은 영국과 일본의 관련 논문을, 을은 통계청 인구 조사 보고서를 활용했으므로 두 연구가 공통으로 사용한 방법은 문헌 연구법이다.
문헌 연구법은 새로 조사 대상을 만나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과거 또는 해외 자료도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 수치로 된 양적 자료와 문서·기록 등의 질적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자료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문헌 연구법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효율적이다. 따라서 'ㄱ, ㄴ'은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문헌 연구법은 과거 자료나 해외 자료도 활용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이다. 따라서 'ㄱ, ㄷ'은 옳은 조합이 아니다.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다. 논문·보고서에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자료 수집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문헌 연구법에서도 연구자가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해석하므로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이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문헌 연구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지만, 자료의 선택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ㄷ, ㄹ'은 옳은 조합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ㄱ의 '비효율적'과 ㄹ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적다'가 함정이다. 기존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은 시간·비용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 자료를 고르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자동으로 객관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논문·통계·보고서·기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먼저 문헌 연구법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시간·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시간·공간의 제약이 적다', '양적·질적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를 연결하고, 자료 선택과 해석에는 주관이 개입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문헌 연구법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므로 시간·비용과 시공간 제약은 줄지만, 해석의 주관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7. 다음은 「형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23조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정당행위
④ 자구행위
⑤ 피해자의 승낙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가운데 자구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자구행위는 국가의 법정절차를 기다리면 청구권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권리자가 스스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행위이다. 위법성 조각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이 허용하는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핵심 구분

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정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시문은 자구행위에 관한 조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다. 틀린 표현: 정당방위. 올바른 표현: 제시문은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이다.
② X —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다. 틀린 표현: 긴급피난. 올바른 표현: 제시문은 법정절차로 보전할 수 없는 청구권을 스스로 보전하는 자구행위이다.
③ X —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틀린 표현: 정당행위. 올바른 표현: 제시문은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이다.
④ O — 제시문은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 요건과 과잉자구행위의 형 감경·면제 가능성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⑤ X —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말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피해자의 승낙. 올바른 표현: 제시문은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라 자구행위이다.

오답 포인트

‘벌하지 아니한다’와 ‘초과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표현만 보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청구권’, ‘법정절차로 보전할 수 없음’,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 자구행위를 가리키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면 정당방위, 현재의 위난이면 긴급피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 법정절차로 보전하기 어려운 청구권을 스스로 지키는 행위이면 자구행위, 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한 승낙이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청구권·법정절차 불능·실행 곤란은 자구행위의 핵심 표지이다.

NoteBase

8. 갑과 을의 대화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각각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교육은 그 사회가 합의한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 을: 저는 그 합의라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① 갑의 관점에서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비교될 수 있다.

② 을의 관점에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③ 갑의 관점에서 사회 집단들 간의 이익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

④ 을의 관점에서 사회에서 협동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⑤ 갑의 관점에서 사회 구성요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 및 각 관점의 한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이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유기체로 보는 관점이다. 사회 각 요소의 기능, 안정, 통합을 강조한다.

갈등론: 사회를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집단들의 경쟁과 갈등 구조로 보는 관점이다. 지배와 피지배, 불평등, 사회 변동을 강조한다.

핵심 대비: 기능론은 합의·기능·안정·통합을, 갈등론은 대립·불평등·지배·변동을 중심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기능론은 사회를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의존하며 전체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② O —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므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③ X — '사회 집단들 간의 이익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갈등론의 설명이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가치 합의를 통해 사회 질서와 통합이 유지된다고 본다.
④ O — 갈등론은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므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협동, 합의, 안정, 통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⑤ O — 기능론은 각 사회 구성 요소가 맡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때 사회가 안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이익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함정이다.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이며, 기능론은 가치 합의와 이해관계의 조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의·상호 의존·역할 수행·안정·통합이 나오면 기능론으로, 기득권·지배와 피지배·이익 대립·불평등·변동이 나오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또한 기능론은 갈등과 변동을, 갈등론은 협동과 통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합의와 통합, 갈등론은 대립과 변동이다.

NoteBase

9. 다음 표는 재화의 종류를 소득탄력성에 따라 A~D로 분류한 것이다. A와 C에 해당하는 재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table>
<tr><th>소득탄력성(ε)</th><th colspan="2">재화의 구분</th></tr>
<tr><td>$\varepsilon < 0$</td><td colspan="2">A</td></tr>
<tr><td>$0 < \varepsilon < 1$</td><td>B</td><td rowspan="2">D</td></tr>
<tr><td>$1 < \varepsilon$</td><td>C</td></tr>
</table>

	A	C
①	열등재	사치재
②	열등재	정상재
③	필수재	사치재
④	필수재	열등재
⑤	사치재	필수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소득탄력성의 부호와 크기를 읽어 열등재·필수재·사치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소득탄력성 ε의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한다.
2. 양수이면 1보다 작은지 큰지 확인한다.
3. $\varepsilon < 0$은 열등재, $0 < \varepsilon < 1$은 필수재, $\varepsilon > 1$은 사치재로 연결한다.

핵심 근거

표에서 A는 $\varepsilon < 0$인 구간이므로 열등재이다. C는 $\varepsilon > 1$인 구간이므로 사치재이다. 또한 양의 소득탄력성을 갖는 B와 C를 함께 묶은 D는 정상재이다. 따라서 A와 C를 각각 열등재와 사치재로 연결한 ①이 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표의 $\varepsilon < 0$ 구간이므로 열등재이고, C는 $\varepsilon > 1$ 구간이므로 사치재이다. 두 연결이 모두 정확하다.
② X — A를 열등재로 연결한 것은 맞지만, C에 대응하는 세부 구분은 사치재이다. 정상재는 표에서 B와 C 전체를 묶은 D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C－정상재'는 'C－사치재'로 고쳐야 한다.
③ X — C를 사치재로 연결한 것은 맞지만, A는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열등재이다. 틀린 표현 'A－필수재'는 'A－열등재'로 고쳐야 한다.
④ X — A와 C를 모두 잘못 연결하였다. A는 열등재이고 C는 사치재이다. 틀린 표현 'A－필수재, C－열등재'는 'A－열등재, C－사치재'로 고쳐야 한다.
⑤ X — A와 C의 구분을 모두 잘못 연결하였다. A는 열등재이고 C는 사치재이다. 틀린 표현 'A－사치재, C－필수재'는 'A－열등재, C－사치재'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C는 정상재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표에서는 양의 소득탄력성 전체를 D인 정상재로 묶고 그중 $\varepsilon > 1$인 C를 사치재로 세분한다. ②처럼 상위 개념인 정상재를 C에 직접 대응시키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 열등재로 판단한다. 양수이면 정상재이며, 그중 0과 1 사이는 필수재, 1보다 크면 사치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음수는 열등재, 0~1은 필수재, 1 초과는 사치재이다.

NoteBase

10. 시민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였다.
② 대표적으로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있다.
③ 이론적으로 계몽사상,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설의 확산에 힘입었다.
④ 혁명의 결과로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다.
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추구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시민 혁명의 주체·사상적 배경·대표 사례·성과를 이해하고, 시민 혁명이 직접 민주 정치를 추구했다는 설명의 오류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민 혁명은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과 신분제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근대 시민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정치적 변혁이다. 사상적으로는 계몽사상,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았으며, 국민 주권·권력 분립·자유·평등의 이념을 확산하였다. 다만 혁명 직후부터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대체로 제한 선거와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정치 체제가 형성된 뒤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민 계급은 절대 왕정과 신분제에 맞서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 혁명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였다.
② O —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시민 혁명의 대표적 사례이다.
③ O — 계몽사상은 이성과 진보를 강조하였고, 천부인권 사상과 사회계약설은 인간의 본래적 권리와 국민에 근거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제시하여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④ O — 시민 혁명의 결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었다.
⑤ X — 틀린 표현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이다. 시민 혁명 이후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치를 담당하는 대의 민주 정치가 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에는 재산·성별 등에 따른 제한 선거가 일반적이었다. 올바르게는 '시민 혁명은 대의 정치의 발전과 참정권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시민 혁명이 국민 주권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의 직접 참여'로 과장한다. 국민 주권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고, 직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대표를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민 혁명 문항에서는 주체는 시민 계급, 사상은 계몽·천부인권·사회계약, 정치 원리는 국민 주권·권력 분립, 제도는 대의 정치의 발전으로 연결한다. '모든 시민', '직접 결정'처럼 혁명 직후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표현은 제한 선거의 현실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시민 혁명은 국민 주권의 출발이지만, 곧바로 모든 시민의 직접 민주 정치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NoteBase

11.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치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연상태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지만 재산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졌다.

① 이데아를 이해하는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②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필요하다.
③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④ 시민 모두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⑤ 자유의 보존과 확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상정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상태의 선함과 평등이 사유재산으로 훼손되었다고 본 루소를 찾아내고, 그의 일반의지·인민주권 사상을 이상적인 정치 형태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루소: 일반의지와 인민주권 — 주권자인 시민이 공동선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플라톤: 철인 정치 —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홉스: 절대 주권 — 자연 상태의 투쟁을 끝내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주권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로크: 제한 정부 —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밀: 대의 민주 정치 — 시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중시하면서 대의 정부를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데아를 이해하는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 정치에 관한 플라톤의 주장이다. 루소의 주장으로 고치면 시민 전체가 주권자로서 일반의지에 따른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② X —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홉스의 절대 주권론에 해당한다. 루소의 주장으로 고치면 주권은 특정 통치자가 아니라 인민에게 있으며 정치는 일반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X —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로크의 제한 정부론이다. 루소의 주장으로 고치면 시민이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한 일반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해야 한다.
④ O — 모든 시민이 공동선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설명은 루소가 이상적으로 본 직접 민주 정치와 일치한다.
⑤ X —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라는 표현은 루소의 정치사상과 맞지 않는다. 루소는 주권과 일반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그의 주장으로 고치면 시민이 일반의지에 따라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각 선지는 모두 근대 또는 고대 정치사상에서 익숙한 표현이지만 서로 다른 사상가의 핵심 주장을 섞어 놓았다. 특히 ③의 생명·자유·재산은 로크, ②의 절대 권력은 홉스의 표지이며, 제시문의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은 루소를 찾는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 상태의 선한 인간, 사유재산에서 비롯된 불평등이 나오면 루소를 먼저 연결한다. 이어 일반의지·인민주권·시민의 직접 참여가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루소는 자연적 선함과 평등,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 일반의지, 인민주권, 직접 민주 정치를 하나의 묶음으로 기억한다.

NoteBase

12. 다음은 「민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이)라고 한다.

① ㉠에 들어갈 용어는 '성년 의제'이다.
② ㉠은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결혼한 미성년자가 이혼해도 ㉠의 효과는 지속된다.
④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주, 흡연이 금지된다.
⑤ 결혼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혼인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와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민법상 성년자로 다루는 것과 다른 법률의 연령 기준까지 모두 바뀌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성년의제 = 실제 나이는 미성년이지만 적법한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자와 같이 취급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효과는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자기 자녀에 대한 친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별도의 연령 기준을 정한 경우까지 혼인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도 청소년 여부를 혼인이 아니라 연령으로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에 들어갈 용어는 '성년의제'이다. 민법 제826조의2가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② X
- 성년의제의 효력이 민법 이외의 모든 법률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이 독자적인 연령 기준을 두면 그 기준이 적용된다.
- 틀린 표현: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 올바른 표현: '성년의제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며, 청소년 보호법 등 공법상 연령 기준에까지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③ O
- 혼인으로 성년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뒤 이혼하더라도 다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

④ O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청소년이다. 따라서 주류와 담배의 판매·제공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상 제한이 계속 적용된다.

⑤ O
-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로 의제되어 종전 법정대리인의 친권에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답 포인트

②의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도'라는 표현을 모든 법률에 대한 포괄적 효력으로 읽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성년의제는 민사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연령 제한까지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혼인한 미성년자가 나오면 먼저 민사상 법률행위·친권·후견에 관한 문제인지, 다른 법률이 정한 독자적인 연령 제한에 관한 문제인지 구분한다. 전자는 성년의제가 적용되지만 후자는 해당 법률의 연령 기준을 따진다.

암기 포인트

혼인하면 민사상 성년, 다른 법률의 나이 기준까지 자동 성년은 아니다.

NoteBase

13. 다음은 A국과 B국의 사회 계층별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구분	A국		B국	
	1980년	2020년	1980년	2020년
상층	20	25	15	25
중층	30	20	30	50
하층	50	55	55	25

① A국의 계층 구조는 폐쇄적으로 변화되었다.

② B국에서는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았다.

③ A국과 달리 B국의 상층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④ A국과 B국 모두 1980년에 비해 2020년에 계층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⑤ A국에 비해 B국은 사회 불안 요소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계층 구조가 변화하였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국과 B국의 계층별 인구 비율 변화를 비교하여 계층 양극화와 사회 불안정성의 변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인구수가 아니라 비율(%)임을 확인한다.
2. 각 나라에서 상층·중층·하층의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비교한다.
3. 중층이 축소되고 상층과 하층이 확대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층이 확대되고 하층이 축소되면 사회 불안 요소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핵심 근거

A국은 상층이 20%에서 25%로, 하층이 50%에서 55%로 증가하고 중층은 30%에서 20%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계층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이다.
B국은 상층이 15%에서 25%로, 중층이 30%에서 50%로 증가하고 하층은 55%에서 25%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A국과 비교하면 중층이 확대되고 하층이 축소되어 사회 불안 요소가 약화되는 방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국은 중층이 30%에서 20%로 줄고 상층과 하층이 각각 5%포인트씩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폐쇄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A국은 계층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이다.
② X — 표는 1980년과 2020년의 계층별 인구 비율만 보여 줄 뿐, 개인별 계층 이동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상승 이동자와 하강 이동자의 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③ X — 표의 단위는 인구수가 아니라 비율이다. B국의 상층 비율은 15%에서 25%로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상층 인구수의 증감은 알 수 없다. 올바르게는 'B국의 상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였다'이다.
④ X — A국은 중층 축소와 상·하층 확대로 양극화가 심화되었지만, B국은 중층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하층이 55%에서 25%로 축소되었다. 올바르게는 'A국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나 B국에서는 양극화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이다.
⑤ X — 이미지의 선지는 B국이 사회 불안 요소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B국은 A국과 달리 중층 비율이 확대되고 하층 비율이 크게 축소되었으므로 사회 불안 요소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미지 문구 그대로라면 틀리며, 공식 정답 5번이 성립하려면 '악화'가 '약화'로 정정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비율의 증가·감소를 인구수의 증가·감소로 바꾸어 해석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또한 ①처럼 한 시점별 계층 구성 비율만으로 계층 구조의 개방성이나 폐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는 A국의 중층 축소와 B국의 중층 확대를 같은 방향으로 읽게 만드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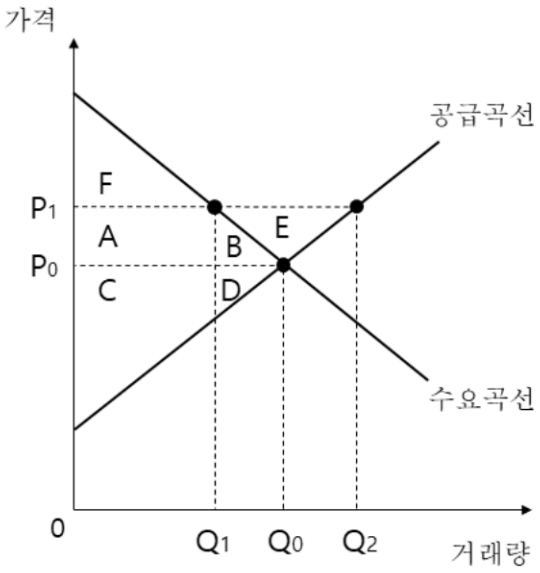
먼저 단위가 비율인지 인구수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중층의 증감을 중심으로 상층과 하층의 변화를 함께 본다. 중층 축소와 상·하층 확대는 양극화 심화, 중층 확대와 하층 축소는 사회 불안 요소 약화의 방향으로 판단한다. 전체 인구 규모나 개인별 이동 자료가 없으면 인구수와 이동 가능성은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중층 축소는 양극화 심화, 중층 확대는 사회 안정 강화의 방향이다. 비율 자료만으로 인구수는 판단할 수 없다.

NoteBase

14. 다음 그림은 정부가 어느 상품 가격을 P_1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 잉여는 A만큼 감소한다.
② 사회적 잉여는 B+D만큼 감소한다.
③ 생산자 잉여는 A+B+E만큼 증가한다.
④ 거래량은 Q_2에서 Q_0만큼 감소한다.
⑤ Q_1에서 Q_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균형가격보다 높은 최저가격 P_1이 설정될 때 거래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규제 전 균형점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Q_0, P_0)이다.
2. $P_1 > P_0$이므로 P_1은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이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Q_1, 공급량은 Q_2이다.
3. 정부가 초과공급을 매입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인 Q_1이 된다.
4. 규제 전 사회적 잉여에서 사라지는 면적은 $B + D$이다.

NoteBase

핵심 근거

규제 전 소비자 잉여는 $F + A + B$, 생산자 잉여는 $C + D$이다. 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F, 생산자 잉여는 $A + C$가 된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A + B$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의 순변화는 $A - D$이며, 사회적 잉여는 $B + D$만큼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소비자 잉여는 규제 전 $F + A + B$에서 규제 후 F로 변하므로 A만이 아니라 $A + B$만큼 감소한다. 틀린 표현 'A만큼 감소'는 '$A + B$만큼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② O — 규제로 거래되지 않는 Q_1부터 Q_0까지의 상호 이익이 사라지며, 그 면적이 수요 측 B와 공급 측 D이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는 $B + D$만큼 감소한다.
③ X — 생산자 잉여는 $C + D$에서 $A + C$로 변하므로 순변화는 $A - D$이다. '$A + B + E$만큼 증가'는 'A를 얻고 D를 잃으므로 순변화는 $A - D$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규제 전 거래량은 Q_0이고 규제 후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인 Q_1이므로 거래량은 $Q_0 - Q_1$만큼 감소한다. 'Q_2에서 Q_0만큼 감소'는 'Q_0에서 Q_1로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⑤ X — P_1에서 공급량 Q_2가 수요량 Q_1보다 크므로 $Q_2 - Q_1$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초과수요'는 '초과공급'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가 새로 얻는 면적 A만 보고 생산자 잉여가 무조건 크게 증가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거래량 감소로 생산자가 잃는 면적 D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또한 최저가격에서는 공급량 Q_2가 실제 거래량이 아니며, 실제 거래량은 더 적은 수요량 Q_1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균형가격보다 높은 최저가격이 제시되면 규제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찾는다. 정부 매입이 없으면 실제 거래량은 둘 중 작은 수요량이며, 규제로 사라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이 사중손실이자 사회적 잉여 감소분이다.

암기 포인트

최저가격은 '높은 가격·적은 거래량·초과공급'이며, 사중손실은 줄어든 거래 구간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 면적이다.

NoteBase

15. 다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 A와 B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 A는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파악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일 2.1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측정한다.

○ B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일정 수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파악한다.

< 보 기 >

ㄱ. A는 절대적 빈곤이다.

ㄴ. B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ㄷ. A는 B와 달리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ㄹ.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가르는 기준을 이해하고, 각 설명의 옳고 그름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인 절대적 빈곤이다. 최저 생계비처럼 최소 생활에 필요한 기준과 비교한다.

B는 한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인 상대적 빈곤이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처럼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는 최소 생활 수준, B는 사회 내 소득 격차가 핵심 구분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B인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틀린 표현인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A와 B의 구분은 빈곤이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틀린 표현인 'A는 B와 달리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A와 B 모두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ㄱ과 ㄹ이 모두 옳다. A는 최저 생계 기준을 적용하는 절대적 빈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A와 B 모두 소득이나 생계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④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B는 고소득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A만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B는 고소득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A와 B 모두 개인적·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A와 B를 나누는 기준은 발생 원인이 아니라 빈곤 기준의 설정 방식이다. 틀린 ㄷ은 'A와 B 모두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가난한 국가에만 생기는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내부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므로 국가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도 존재한다. ㄷ에서는 빈곤의 유형 구분과 빈곤의 발생 원인을 혼동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나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적 빈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 빈곤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보기의 각 문장을 따로 판정한 뒤 옳은 문장만 포함한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절대적 빈곤은 '최소 생활선', 상대적 빈곤은 '사회 안의 비교선'이다.

NoteBase

16.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문화 관련 개념으로 옳은 것은?

> 도시에 자동차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사람들의 교통질서 의식이 미약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사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① 문화 공존
② 문화 동화
③ 문화 접변
④ 문화 지체
⑤ 문화 저항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와 비물질문화의 변화 속도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문화 지체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문화 지체는 기술·도구와 같은 물질문화가 빠르게 변하는 데 비해 가치관·규범·제도와 같은 비물질문화의 변화가 늦어 부조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보급은 빨라졌지만 교통질서 의식과 공공장소의 스마트폰 예절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화 공존은 서로 다른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고, 문화 동화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잃는 현상이다. 문화 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며, 문화 저항은 외부 문화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존 문화를 지키려는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문화 공존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다. 제시문에는 서로 다른 문화의 병존이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문화 공존'이며, 올바르게는 '문화 지체'이다.
② X — 문화 동화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본래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는 현상이다. 제시문에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과정이 없다. 틀린 표현은 '문화 동화'이며, 올바르게는 '문화 지체'이다.
③ X — 문화 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한쪽 또는 양쪽 문화가 변하는 현상이다. 제시문은 서로 다른 문화 간 접촉이 아니라 기술 변화와 의식·규범 변화의 속도 차이를 보여 준다. 틀린 표현은 '문화 접변'이며, 올바르게는 '문화 지체'이다.
④ O — 자동차와 스마트폰이라는 물질문화는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교통질서 의식과 공공장소 예절이라는 비물질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화 속도 차이로 부조화가 생겼으므로 문화 지체에 해당한다.
⑤ X — 문화 저항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 요소를 거부하거나 기존 문화를 지키려는 현상이다. 제시문에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술을 이미 널리 사용하면서 관련 의식과 예절이 뒤처진 모습이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문화 저항'이며, 올바르게는 '문화 지체'이다.

오답 포인트

'자동차 증가'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를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만 보고 문화 접변이나 문화 저항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이 강조하는 것은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나 거부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 속도에 의식과 예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술·도구·산업은 빠르게 변했는데 가치관·규범·제도·윤리가 뒤따르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면 문화 지체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 흡수, 병존, 거부가 핵심인지와 변화 속도의 차이가 핵심인지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물질문화는 앞서가고 비물질문화는 뒤처지면 문화 지체이다.

NoteBase

17. 다음 글은 사회 보장 제도의 내용이다. ㉠~㉢에 대한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는 시행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은/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은/는 현재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은/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① ㉠은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른다.
② ㉡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
③ ㉢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은 ㉠보다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⑤ ㉢은 ㉡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약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회 보장 제도의 세 유형인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목적과 운영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사회 보험: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분담하고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사전 예방, 보험료, 상호 부조이다.
㉡ 공공 부조: 현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사후 구제, 무기여, 소득 재분배이다.
㉢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의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비금전적 지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사회 보험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므로 상호 부조의 원리에 따른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이다. ㉡ 공공 부조는 수급자의 보험료나 기여금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로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여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아래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이다.
③ O — ㉢ 사회 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O — ㉠ 사회 보험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반면, ㉡ 공공 부조는 이미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제하므로 사후 처방적 성격이 더 강하다.
⑤ O — ㉡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직접 보장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사회 서비스는 주로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공 부조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과 사회 보험의 보험료 분담을 공공 부조에 잘못 연결한 선지이다. 공공 부조는 수급자의 사전 기여 없이 조세로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래 위험·보험료·상호 부조이면 사회 보험, 현재 빈곤·조세·무기여이면 공공 부조, 상담·재활·돌봄 같은 비금전적 지원이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미래 대비, 공공 부조는 현재 구제,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도움이다.

NoteBase

18. 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옷과 바나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옷	바나나
A국	2시간	4시간
B국	12시간	6시간

① A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
② B국의 옷 1단위 생산 시 기회비용은 바나나 2단위이다.
③ A국은 바나나 생산, B국은 옷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A국과 B국 간 옷 1단위의 교역조건은 바나나 1/2단위에서 2단위 사이이다.
⑤ 옷과 바나나의 판매가격이 같다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완전 특화한 후 교역하는 것이 A국과 B국 모두에 이득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이용해 절대우위와 기회비용에 따른 비교우위를 판단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조건을 찾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더 적은 국가를 찾아 절대우위를 판단한다.
2. 한 재화 1단위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수량으로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3.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4.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교역조건이 형성되는지 판단한다.

핵심 근거

A국은 옷 1단위에 2시간, 바나나 1단위에 4시간이 들고 B국은 각각 12시간, 6시간이 든다. 따라서 A국은 두 재화 모두 노동시간이 더 적어 절대우위를 가진다.
옷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이 $\frac{2}{4} = \frac{1}{2}$단위의 바나나, B국이 $\frac{12}{6} = 2$단위의 바나나이다. 그러므로 A국은 옷에 비교우위가 있다.
바나나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이 옷 2단위, B국이 옷 $\frac{1}{2}$단위이다. 그러므로 B국은 바나나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옷은 A국 2시간·B국 12시간, 바나나는 A국 4시간·B국 6시간이 필요하다. A국의 노동시간이 두 재화 모두 더 적으므로 A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
② O — B국에서 옷 1단위를 생산하는 12시간이면 바나나를 12 ÷ 6 = 2단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B국의 옷 1단위 생산 기회비용은 바나나 2단위이다.
③ X — 비교우위의 방향을 서로 바꿔 쓴 표현이다. 옷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이 바나나 $\frac{1}{2}$단위로 B국의 2단위보다 낮고, 바나나 1단위의 기회비용은 B국이 옷 $\frac{1}{2}$단위로 A국의 2단위보다 낮다. 올바르게는 A국은 옷 생산, B국은 바나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O — 옷 1단위의 국내 기회비용은 A국에서 바나나 $\frac{1}{2}$단위, B국에서 바나나 2단위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옷 1단위의 교역조건은 바나나 $\frac{1}{2}$단위보다 크고 2단위보다 작은 범위이다.
⑤ O — 옷과 바나나의 가격이 같으면 교역조건은 옷 1단위와 바나나 1단위의 교환이다. 이는 바나나 $\frac{1}{2}$단위와 2단위 사이에 있으므로, A국은 옷에, B국은 바나나에 완전 특화한 뒤 교역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생산시간 자체가 더 짧은 재화와 비교우위 재화를 혼동하게 만든다. 비교우위는 노동시간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다른 재화를 얼마나 포기하는지, 즉 기회비용의 상대적 크기로 판단한다. 또한 ④와 ⑤에서는 교역조건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간 표에서는 먼저 시간이 적은 쪽으로 절대우위를 찾고, 각 재화의 노동시간을 다른 재화의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기회비용을 구한다. 기회비용이 낮은 국가가 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교역조건이 두 국가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으면 양국 모두 교역이익을 얻는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더 적은 생산시간, 비교우위는 더 낮은 기회비용이다.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정해진다.

NoteBase

19. 다음은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특징	비교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	A > B
㉠	A > B
대면 접촉의 비중	A < B

① A의 주된 조직형태는 관료제이다.
② B의 부가가치의 원천은 지식, 정보이다.
③ A는 B에 비해 일방향 매체가 많이 사용된다.
④ B는 A에 비해 변동 속도가 빠르다.
⑤ ㉠에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의사 결정의 분권화와 대면 접촉의 비중을 근거로 정보 사회와 산업 사회를 구분하고, 두 사회의 조직·매체·변동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정보 사회이다. 정보 사회는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와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고, 쌍방향 매체와 수평적·네트워크형 조직이 발달하며 사회 변동이 빠르다.
B는 기계와 대량 생산이 중심이 되는 산업 사회이다. 산업 사회는 관료제적 조직과 일방향 대중 매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정보 사회보다 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의 주된 조직 형태가 관료제라는 부분이 틀리다. 관료제는 산업 사회인 B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정보 사회인 A에서는 수평적·분권적 네트워크 조직이 발달한다.
② X — B의 부가가치 원천이 지식·정보라는 부분이 틀리다. 지식과 정보가 주요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는 정보 사회인 A이고, 산업 사회인 B는 자본과 노동을 바탕으로 한 재화의 대량 생산이 중심이다.
③ X — A에서 일방향 매체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정보 사회인 A에서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 쌍방향 매체의 비중이 크고, 산업 사회인 B에서는 일방향 대중 매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④ X — B가 A보다 변동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이 틀리다. 정보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사회인 A가 산업 사회인 B보다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르다.
⑤ O — 정보 사회인 A는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다양해지고 여러 집단의 요구가 활발하게 표출되므로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산업 사회인 B보다 높다. 따라서 ㉠에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표의 '대면 접촉의 비중 A < B'만 보고 B를 정보 사회로 오인하기 쉽다. 정보 사회는 정보 교류 자체는 활발하지만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므로 대면 접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지식·정보, 쌍방향 매체, 빠른 변동은 모두 A의 특징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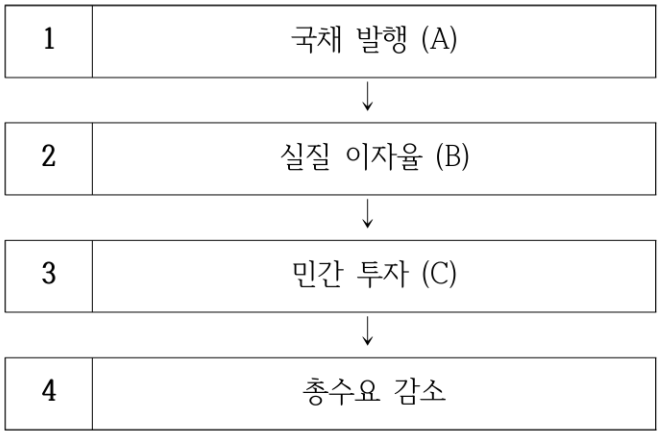
분권화·다원화·쌍방향 매체·네트워크 조직·빠른 변동이 제시되면 정보 사회로, 관료제·대량 생산·일방향 대중 매체가 제시되면 산업 사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 사회는 분권·다원·쌍방향·빠른 변동, 산업 사회는 관료제·대량 생산·일방향이다.

NoteBase

20. 다음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A)	(B)	(C)
①	증가	상승	감소
②	증가	상승	증가
③	증가	하락	증가
④	감소	상승	증가
⑤	감소	하락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확장적 재정정책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때 국채 발행, 실질 이자율, 민간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며 총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국채 발행 증가 —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다.
2. 실질 이자율 상승 — 정부의 자금 차입이 늘어나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
3. 민간 투자 감소 — 실질 이자율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4. 총수요 감소 — 민간 투자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민간 투자 감소는 총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왜 이 순서인가: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채 발행 증가, 실질 이자율 상승, 민간 투자 감소를 순서대로 연결하므로 도식의 인과관계와 일치한다.
② X — (C)의 '증가'가 틀렸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비용이 커지므로 민간 투자는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A) 증가, (B) 상승, (C) 감소'이다.
③ X — (B)의 '하락'과 (C)의 '증가'가 틀렸다. 국채 발행 증가로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 결과 민간 투자는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A) 증가, (B) 상승, (C) 감소'이다.
④ X — (A)의 '감소'와 (C)의 '증가'가 틀렸다.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증가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투자는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A) 증가, (B) 상승, (C) 감소'이다.
⑤ X — (C)의 '감소'는 맞지만 (A)의 '감소'와 (B)의 '하락'이 틀렸다. 국채 발행은 증가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올바르게는 '(A) 증가, (B) 상승, (C)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말만 보고 모든 변수가 증가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은 정부 지출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국채 발행 증가가 이자율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를 묻는다. 특히 ②의 민간 투자 '증가'와 ⑤의 실질 이자율 '하락'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로 재정을 조달하는 흐름에서는 '정부 차입 증가 → 자금 수요 증가 → 실질 이자율 상승 → 민간 투자 감소'의 인과관계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민간 투자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라는 점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국채 발행 증가 → 이자율 상승 → 민간 투자 감소: 구축 효과이다.

NoteBase